

3대 악재 ‘발목’…기로에 선 무안공항

전북도 새만금신공항 추진·광주 민간공항 이전 지지부진
안개 결항 시설·인력 보완 시급…서남권 거점공항 ‘위태’

무안국제공항이 권역거점공항으로 거듭날 것인지 지역공항에 머물 것인지 기로에 섰다. 전북도가 새만금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광주(민간)공항 이전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 수요가 늘었으나 갑작스런 안개로 7~8일간 결항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설 및 조업 인력 보완도 시급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2016~2020)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초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북도의 새만금신공항 건립 요청에 따라 11월 말까지 새만금신공항을 포함해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항공 수요에 의해 신공항 건립이나 기존 공항의 시설 신규 투자 방향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내에서는 새만금신공항 입지 부

지를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분위기다. 군산시가 신공항 입지로 군산공항 일원을 제안하고 마군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전북도는 “공항 입지는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호남권 신공항’에 대한 전북도내 공감대가 강해 권역거점공항인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남도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광주(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여전히 제 자리를 맴돌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3일 2015 하반기 광주·전남상생협의회 위원회를 갖고 지역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나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시기가 2022년으로 잡혀 있어 당

장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무안공항 이용객은 2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 8000명에 비해 2배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안개로 인해 7~8일간 15편이 넘는 중국·일본 노선이 결항되면서 공항 시설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활주로 연장, 운영 등급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정부의 ‘수요 논리’에 밀려 반반이 국비 지원 목록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태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24시간 지상 조업’은 한국공항공사가 자체 용역을 발주, 내년 10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화순 남산공원 국화향연

26일 화순군 남산공원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국화꽃으로 물들어 있다. 다음달 1일까지 남산공원 일대에서 진행되는 ‘2015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 축제에는 화순적벽을 형상화한 국화조형물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공룡 조형물 등이 전시됐다.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이 은은한 국화향기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능 코 앞 전투기 100회 비행? ▶6면

블루오션다도해-원도 금당-평일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가뭄 … 섬진강 거슬러 오르는 연어마저 끊겼다

유수량 크게 줄어

연어의 회귀를 기다리는 전 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소속 연구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뭄으로 섬진강 유수량이 줄면서 하류의 연어가 그물기 설치된 종류(광양

시 다압면)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까지 간신히 포획한 연어는 모두 23마리에 그쳤다. 이들 연어는 방류된 후 북태평양 등에서 3~5년을 보낸 뒤 일본 홋카이도와 규슈를 거쳐 섬진강 하류에 집결, 산란기간 10~11월이 되면 태

어난 곳으로 돌아와(모전회귀) 산란하고 생을 마친다. 그러나 올해 섬진강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하류에서 산란하는 개체가 늘어나 포획 개체수가 지난해 188마리 보다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기세운(33) 연구사는 “올해는 상당수 연어가 섬진강 하류에서 산란한 뒤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방류할 연어 치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국정화 홍보’ 반사회 문건 시·군·구에 여과없이 전달

광주시·전남도 비난 목소리

교육부가 반사회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행사부에서 보내온 ‘국정화 홍보 협조요청’ 문건을 기초지자체인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에 내려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교수·교사 등 학계와 학생들까지 나서 국정화 교과서 반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중앙부처 협조 요청을 곧이 곧대로 일선 동사무소 등에 내려 보낸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15년 10월 중 정례반사회 홍보자료 공문’이 접수돼 이를 최근 각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홍보자료 목록에는 협조·공지사항으로,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행정자치부) 등 30가지의 정부부처 행사 및 사업이 망라돼 있었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홍보를 요청한

‘교육개혁 6대 과제’ 등 4개 자료에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자료가 첨부됐다.

A4 1장짜리인 이 자료에서 교육부는 ‘균형잡힌 교과서’, ‘최고 품질의 교과서’, ‘자긍심을 높이는 교과서’ 등을 언급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리를 담았다.

광주·전남 일부 기초단체는 이를 다각각 동·면사무소에 배포해 최근 성남시와 부천시 등 일부 야당 기초단체장들의 ‘교과서 홍보 반사회 거부’와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반사회를 이미 개최한 동구 산수 1·2동, 북구 유암·두암 1동 등의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반사회 홍보자료에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홍보 내용을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반사회에서 홍보할 내용을 정부부처에서 받아 일선 지자체에 보냈다”며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릴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선 지자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새정치 전남·전북 국회의원들 오늘 화동 ‘농어촌 지역구 현행대로 존치’ 집단 행동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당 지도부에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6일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에 따르면 전남·북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은 이날 회동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현행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에 연대 서명을 한 뒤, 이를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지사와 전북지사를 포함, 전남과 전북 유권자들의 ‘농어촌 지역구 존치’ 서명안 2만여장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전남북 의원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은 ‘비례대표 의석수 현행 유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당 지도부에 강력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에서 전남북 의원들의 집단 행동은 사실상 당 지도부에 호남의 농어촌 의석 존치와 비례대표 의석 고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호남 민심이 최소 3석 이상으로 거론되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本 社 人 事

▶유임현 : 기획관리본부장

<10월 27일자>

우리 아이들이
역사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역사교과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에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부